

2000년 해외전시회참가 대폭확대

산업자원부(장관 정덕구)는 2000년 전시회 참가예산을 대폭 확대('99: 1백60억원, 2000: 1백80억원)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및 상품이미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해외전시회 참가는 전시회의 특성별로 구분해 참가주관 지원방식을 달리함으로써 그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즉 정책전시회의 경우 국가 및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노버 EXPO와 동경부품전시회를 지원한다.

한편 업종별 해외전문전시회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등 37개 업종별 단체가 주관하되 KOTRA가 측면 지원해 상하이 산업전시회 라스베가스 정보통신전시회(COMDEX

Fall) 등 13개국 50회(미국 9회, 홍콩 8회, 독일 7회, 일본 5회, 중국 5회, 영국 4회 등)의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선호하는 신기술전시회에도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2백23개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지원을 실시해 수출증대 기술동향파악 등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전시회 지원예산 10억원을 활용, 규모가 크고 수출효과가 뛰어난 4~5개의 국내 개최전시회를 선정·지원해 국제규모의 전문전시회로 육성함으로써 내년이후 건립완공될 COEX ASEM Center(2000. 3) 부산종합전시장(2001. 3) 수도권전시장(2002. 4)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대비키로 했다.

2015년까지 발전설비 7,906만KW로 확충

산업자원부는 전력수요가 2015년 6,751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해 발전설비를 7,906만KW로 확충하는 동시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 전력수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확정할 방침이다.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전력소비는 '99년 2,111억KWh로 매년 연평균 4.1%의 증가

추세가 이어져 오는 2015년에 가서는 3,818억KWh로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전력소비 역시 '98년 4,573KWh에서 2010년에는 7,505K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과 비교해 40년, 일본에 비해서는 13년차가 나는 것이다.

최대전력 수요는 '99년 3,729만KW에서 연평균 4.3% 증가 추세가 계속돼 2015년에는 6,751만KW에 이를 전망인데 '99년~2005년까지는 6%,

2006년~2010년까지 3%, 2011년~2015년까지 2%의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전망은 향후 고급에너지인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이같은 전력수요증가에 대응, 수요관리를 강화해 최대전력 삭감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2015년까지 수요관리 목표를 1,179만KW로 확대해 최대전력을 743만KW 삭감하고 2003년 이후 전력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 강화 추진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각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들도 상품출시나 수입 때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2월 13일 소비자들이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소비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소비자안전 제도를 위한 기본방향'을 3월에 마련한 뒤 '소비자안전 종합대책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정비할 법률과 제도는 소비자보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소보원 위해정보관리시스템, 리콜제도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경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13명을 일본에 파견,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에 대해

조사작업을 벌였다.

조사단이 방문하는 기관은 일본의 통산산업성, 제품평가기술센터, 농림수산성, 식품종합연구소, 후생성, 의약품·식품 위생연구소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혁신에 따른 신물질, 신소재 상품 개발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다 시장개방화로 인해 외국의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점검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라면서 "종합대책 가운데 법개정없이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바로 제도개선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연기

제조물책임(PL)법 시행시기가 2002년 7월로 연기됐다. 당초에는 올해초 이 법을 공포한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 실시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충분한 사전준비

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2월 13일 국회재경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동안 PL법의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품 결합으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 △수출품에

대해 우리기업은 보상을 하고 있는 차별문제 △소비자의 안전을 감안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체제 △PL관련 보험 가입시 기업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600여 중소기업에 수출전문인력 파견

정부는 내년중 600여개 중소기업에 수출전문인력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일손이 부족해 해외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수출전문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수출중소기업 현장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00여개 늘어난 600여 중소기업에 전문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지난 한해동안 연인원 12만7천명(일일 평균 470명)을 1200여개 중소기업에 파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원인력중 430여명은 지원중인 중소기업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에는 지원대상 인력을 증원, 연인원 6만1천명(일평균 280명)을 600여개

수출중소기업에 파견할 방침이다. 또 1월부터 시작되는 1단계 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400여명의 전문인력을 내년 3월말까지 모집해 400여개 중소기업체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출전문인력은 신청일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18세이상 65세 이하의 수출분야 유경험자 및 대졸 관련학과 미취업자다.

지원분야는 해외 바이어발굴, 무역금융, 수출보험, 영문카드로그 제작, 통·번역, 인터넷무역 등 해외마케팅 및 수출업무 전반이다. 지원기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마케팅 인력이 부족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여성기업이나 부품소재분야의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문의 042-481-4466, www.smba.go.kr→수출전문인력 현장지원사업>

중소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내년 81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중소기업의 해외유명규격

획득에 81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지난 12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 및 기술·품질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유명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기간은 2000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기청·컨설팅기관과 협약을 체결, 해외인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제품 시험 및 공장심사 등 인증절차를 대행 받게 된다. 중기청은 인증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또 중기청 지원금 이외 업체가 부담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업체 희망시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분야는 UL/FDA(미국), CSA(캐나다), CE(유럽), GOST(러시아), CCIB(중국), VDE(독일), JIS(일본), SEMKO(스웨덴), IRAM(아르헨티나), QS-9000(자동차부품), 스위치 등 50개 기초부품 등이다. 단 ISO-9000/1400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지원신청서와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각 지방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2-481-4452, <http://techno.smba.go.kr>→해외인증지원>

내년 3월 中企, 金融支援 博覽會 연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박람회가 내년 3월 개최된다. 또 은행의 후순위담보채펀드 자산운용 대상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발행 채권도 일정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2월 23일 은행회관에서 정부, 은행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소기업에게 정책 및 금융자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획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3월중 정부부처 및 은행 등이 참여한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허용한 은행의 후순위담보채펀드 자산운용 대상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발행

채권도 일정부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정부·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구조조정조합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지원이나 대출금·구상권 출자전환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도위기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운영중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내년부터는 지방청과 공인회계사간의 공동평가 후 거래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최종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신한·한미은행도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올해보다 5조7천억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0년도 중소·벤처기업 4조 지원

정부는 2000년도 예산 중 4조원 규모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총 523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0년 중소기업 정책운영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호전된 창업 및 경영여건을 바탕으로 내년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벤처투자조합 2호(KVF2) 등 벤처투자조합(3800억원),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1천억원) 및 과학기술전문투자조합(MOST2 430억원) 등 총 523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투자한다.

이를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리콘 벨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KVC)를 설립하고 66억원을 투자해 해외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나스닥 상장을 적극 지원키 위해 정보제공 시스템을 확충하고 '나스닥 서울포럼'도 개최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관(7800억원)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600억

원)에 출연하고 연쇄부도방지를 위한 어음보험기금 1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출기업,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고 1천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지원 인프라를 상호 연계해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성공단계까지 일관 지원하는 (주)다산벤처(자본금 1천억원)를 2000년 4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주)다산벤처는 민간창업투자회사, 엔젤 등이 투자하지 않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선도투자하고 성장단계별 일관지원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스타(Global Star)기업을 양성하게 된다.

한편 2000년 1~2월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특별보증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 중기정책은 중기특위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벤처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준을 단순화하고 정보·영상·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실 코스닥기업 내년 상반기 퇴출

4월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소액주주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대기업은 500만주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분산비율요건이 대폭 확대 된다.

또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코스닥 등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부도가 나거나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에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연간 2회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에 편입된다.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코스닥기업 58개사가 3~5개월 유예기간후 상반기중 퇴출된다. 총자산 2조원이상 대형 코스닥법인은 2001년부터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상장 뒤 바로 내다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폐단을 막기위해 주식의 1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해야 벤처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에 대해

6개월간 주식의 10% 이상 보유를 의무화했다. 코스닥법인의 주식분산비율은 소액주주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 대기업은 발행주식의 10%이상(500만 주이상)으로 강화했다. 현행 주식분산비율은 소액주주 100명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20% 이상, 대기업은 200만주이상(발행주식의 10%이상)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현행 불공정감시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요원을 현재의 12명에서 40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닥기업의 퇴출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총 411개 등록기업중 공시가 불성실하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화돼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58개사를 상반기 정리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법인에 대해서는 1월부터 대형 상장법인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하고 비등록 대기업이 코스닥기업과 합병,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中企보유기술 사업화 300억 지원

중소기업이 개발해 보유중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정부지원사업이 3월 시작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업화 미비로 활용되지 못한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우선 2000년에는 3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총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

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된다. 또 산자부내 설치된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일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진단비용, 시제품 제작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초기 제품위탁생산비용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이 융자된다. 또 개발기술이 단기간 내에 업체의 매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기술에 기초한 대규모 시설투자 이전 소비자에게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조건으로의 경우 대출금리는 여타 정책자금보다 1.0%P 낮은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리('99년 4·4분기 7.25%) 수준으로 하되 시중금리의 변동에 연동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 5년 이내로 하되 지원업체의 장기적인 자금수지상황에 따라 대출기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3억원) 한도에서 업체의 부동산 담보나 보증여력 유무에 상관없이 순수 신용으로 대출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상반기(200억원)는 내년 3월중, 하반기(100억원)는 8월중 각각 받을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인해 연구개발결과를 사장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사업화 및 양산에 이르는 일괄지원 체제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2000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이후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수출지원센터 개소 1년

수출지원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유망 내수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청은 '98년 12월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설치·운영중인 수출지원센터가 수출증대와 해외특새시장개척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수출지원센터는 벤처기업 등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유망 내수 중소기업 1553개사를 발굴, 수출지원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1만7천건의 수출애로사항을 지원했다. 특히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이 성사된 것이 421개사에 약 1017억원에 달하며 수출금융지원 717

개사 1676억원, 기술·품질 및 디자인지원 업체 수가 810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2~3개 센터가 공동으로 종합상사 등 무역상사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퇴직수출전문인력과 대학의 관련졸업자를 선발해 1215개사에 연인원 12만6천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한편 중기청은 2000년도에는 소규모의 신용보증서 발급 등 센터 현장직접처리업무를 확대함은 물론 수출지원사업을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지원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수출지원센터는 KOTRA·수출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신보 및 기술신보등 15개 수출지원기관의 중견실무인력 92명이 파견돼 마케

팅, 수출보험, 신용보증, 디자인, 품질 및 기술개발지원, 해외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KS규격 국제화 시동

국가산업표준(KS) 규격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1만500여종의 국가규격이 정비,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됨으로써 무역장벽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매년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표준화 수요조사가 실시됨으로써 국가규격 제정 과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이 밝힌 '국가표준제도 추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까지 350억원을 들여 '국가규격의 세계 수준화 5개년 사업'을 추진, 1만500여종의 국가 규격이 정비됨으로써 21세기 선진국형 국가규격이 마련된다. 기술표준원은 아울러 국제표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한국 규격의 세계 규격화를 추진하고 국가간 상호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시험검사에 따른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표준화 수요조사의 경우 3천개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토록 함으로써 표준화 과제를 발굴, 이를 규격의 제·개정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규격을 제정할 때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적합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주덕영 원장은 그동안 일본의 국가 규격인 JIS를 모방함으로써 설비, 시험기기, 부품 및 소재의 대일 수입이 불가피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 규격을 세계적인 규격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일치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신기술을 세계 규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시험소 인정기구를 발전시켜 92개 공인시험기관이 세계 규격에 의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와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간 상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F '절연유 열화 센서 의무화' 무산

기술표준원은 지난 12월 16일 서울 신사동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관련 기관 및 업계 간담회를 갖고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9월 제안한 절연유열화 감지센서 내장의무화를 골자로 한 당초

KS규격 개정안을 철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술표준원, 전기안전공사 담당자는 물론 영화산업전기제작소, 서울전기제작소, 삼능전기, 삼능전기제작소, 중원전기공업 등 5개

KS취득 MOF업체와 절연유 열화감지센서를 개발 시판하고 있는 피에스디테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결정은 절연유 열화감지센서 내장사항이 KS규격으로 강제화될 경우 7개 KS취득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설계-제작에 반영해야 하지만 7~8개 비KS업체는 KS규격과 관계없이 현행 설계를 유지함에 따라 KS업체와 비KS업체간의 제품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나며 이로인해 현재 유통 시장을 감안할 경우 KS업체만 배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반영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와함께 MOF안전성 제고와 선

로보호를 위해 수용가가 요구할 경우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재검정제도와 같이 KS업체와 비KS업체 모두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절연유 열화감지센서 내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MOF업체들이 강력히 요청한 재검정제도 부활에 대해 기술표준원은 2월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Q대상공사 낙찰예정자 입찰장서 즉석발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한 낙찰예정자가 입찰현장에서 즉시 발표된다.

또 등록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시설공사나 용역업체의 등록시에 징구하던 등기부등본 제출의무조항은 없어진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서비스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확정 지난달 10일 이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설공사나 용역내·외자 분야별로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로 제한한 뒤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갱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유효기간 자체를 없애 한번 등록을 하면 변경사항이 없는 한 계속 시설공사나 용역 또는 구매입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변경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해업체가 알아서 그때 그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종전 본청과 지방청에서 취급하던 등록업무를 출장소까지 확대해 안동, 강릉, 순천 등에 가지 않고도 지역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설공사 및 용역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할 경우 법인에 한해 징구하던 등기부등본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내자업체 등록시에 제조와 공급업체를 구분해 왔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들 업체들이 제출해왔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시설증명원 등 4종의 서류도 받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등록업종에 문화재수리업을 추가하고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대한 등록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조달청은 또 시설공사 등의 적격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 PQ대상공사의 경우 입찰현장에서 가격평점과 수행능력 등 기술적 예상평점을 산정해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입찰자중 최저입찰자를 낙찰

예정자로 즉석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찰현장에서 최저입찰자의 입찰가격만을 발표한 뒤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평점을 산정해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발표하는 바람에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데 2~3일 정도가 소요됐다.

조달청이 이처럼 현장에서 곧바로 낙찰예정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과의 전문건설망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축적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계약서에 제출요구-심사서류 제출요구-적격서류 심사의뢰-적격서류 심사결과 접수-낙찰자 선정-계약서류 제출요구-계약체결 등 8개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적격심사 절차도 적격대상자 선정-낙찰예정자 선정 및 협약서, 적격서류, 계약서류 제출 일괄요구-적격서류 심사의뢰-심사결과 접수-계약체결 등 5단계로 크게 단축된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현재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사 표준행정 소요일수도 전면 재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선정되기까지 가져야 했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낙찰예정자를 확인하려는 전화문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계약행정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제공

조달청은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에 대해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가격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2000년 1월부터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발행을 책자 대신 인터넷으로 변경하여 시행, 실시간으로 신속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한달에 한번 제공하던 것을 가격변동시마다 자료를 갱신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내용으로는 기존의 매월 책자 발행후 1개월여간 조달청 단가계약현황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격정보의 인터넷 D/B 구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계약과 동시에 가격변동 상황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가격수룩시점은 실시간 및 매월 수록할 예정이며 자료획득은 단가계약품목 등 가격정보지 수록품목을 기존의 편집체계로 직접 검색, 다운로드 검색 및 E-Mail을 통하여 자료를 획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정된 부수의 책자 발간으로 수요기관의 구독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2만6천여 수요기관과 3만여 조달업체에 대해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최신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조달행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달 EDI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